

#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청원번호: 제10-00027호
- 청 원 인: 양천소각장 폐쇄 추진위원장 최신구 외 20,698명
- 소개의원: 신정호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 접수일자: 2020. 8. 14.
- 회부일자: 2020. 8. 21.

### 2. 청 원 요 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양천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해 줄 것을 청원함.

### 3. 소개의원 설명 요지(신정호 의원)

- 1986년 준공된 양천소각장은 현재 일400톤 규모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소각시설 내구·사용연한인 15년을 넘어 무려 30년 이상을 가동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 용역결과와 미국 EPA 기준에 따르면 소각장 피

해영향권은 최소 2.5km이나, 양천소각장은 집단 주거지역에 인접 (2.5km 이내 아파트 42,989세대, 초중고 24개교 등 소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이 위협받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양천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하여 줄 것을 청원함.

#### 4.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황

##### 가. 시설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5동 900-21)
- 시설용량: 400톤/일(200톤/일×2기)
- 처리권역: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
- 운영이력
  - ▶ 1986. 12. 31.: 목동자원회수시설 건설(150톤/일)
  - ▶ 1996. 02. 28.: 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준공(400톤/일)
  - ▶ 2006. 12. 26.: 공동이용 확대 ☞ 3개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 2010. 05. 10.: 공동이용협약체결(서울시,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

##### 나. 2019년도 운영현황

시설용량 (톤/일)	소각량 (톤/일)	가동률(%)	처리량(톤/년)		비고
			반입량	소각량	
400	347	87	104,852	107,834	

## 다. 위치도 및 시설주변영향지역 세대 현황

### <시설 주변영향지역 세대 현황>

구 분	총계	목동1단지	한신 청구	한신빌라트
세대수	3,413	1,882	1,512	19



## 5. 담당부서 의견(기후환경본부)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인구: 약 148만명)의 폐기물 처리 기능 외에 주변지역 5만9천여 세대의 복지에 기여하는 시설임.
-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은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확충 추이 등 폐기물 관리 여건 전망에 따라 검토할 사항임.
  - 서울시는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나 용량 부족으로 2018년 기준 일평균 868톤을 매립 처분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구현을 위해서 2025년까지 1,080톤/일(현 시설용량의 37%)의 추가 용량 확충이 필요함.
-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 또는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직매립 제로’ 이후, 양천자원회수시설 규모 이상 용량(400톤/일)의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정상 가동이 확인된 이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6.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청원은 1986년에 준공되어 현재 일일 400톤 규모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임.

## 나. 검토 의견

###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2018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3,033톤으로, 이 중 71%는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 29%인 868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분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3-1공구)는 2025년부터 사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추가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및 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남권의 금천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용량부족,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금천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전량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분되고 있고, 구로구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현황>

권역 (시설명)	대상 구	공동이용 협약일자	미이용구
계	23개구		2개구
서남권 (양천)	양천, 강서, 영등포	'10. 5.10	구로(광명이용), 금천(매립)
동북권 (노원)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07. 6.30 '12. 1.26	-
동남권 (강남)	강남,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관악	'07. 5. 7 '13. 4.29	-
서북권 (마포)	마포,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 은평(일부 자체소각)	'05. 5.21 '09. 2.10	-

□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공동이용 현황

- 시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로는 자원회수시설, 음식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 선별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센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발전소, 수소충전소 등을 들 수 있음.



■ : 자원회수시설, ● : 물재생센터, ▲ : 정수센터, ◆ : 음식물처리시설, ● : 기타

<서울시 자치구별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

-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분포 현황을 서남권으로 한정해보면, 양천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강서구에는 서남물재생센터(1,032,000m<sup>2</sup>)가 1986년에 설치되어 양천·영등포·강서구 등을 포함한 총 9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분뇨 163만톤/일을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는 바, 이의 폐쇄 및 이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양천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의 입지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현 공동이용 자치구인 양천구와 강서구 및 영등포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지자체 주민들 간에 극심한 갈등 유발이 염려됨.

## □ 자원회수시설 폐쇄 관련 규정 및 절차

-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과 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2012.10.) 해설서’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으로 알려진 15~20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개정본)>

#### Ⅶ. 소각시설의 폐쇄 절차

##### 2. 소각시설의 사용연한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 연한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다.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현황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따라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주민지원기금은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의 형태로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비 등은 협의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019년에 주변영향지역 3,4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12억 3천7백만원(세대당 329만2천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중 난방비 21억 7천5백만원(세대당 63만7천원), 아파트 관리비 61억 2천3백만원(세대당 179만4천원), 주거환경개선비 27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시설이 폐쇄된다면 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비용을 포함한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2019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세대수)	양천 (3,413)	노원 (6,647)	강남 (2,934)	마포 (0)	
난방비 (세대평균)	2,175,311 (637)	2,725,528 (410)	1,039,867 (354)	0 (0)	
지원사업	아파트관리비 (세대평균)	6,123,401 (1,794)	4,900,067 (792)	6,131,225 (2,090)	0 (0)
	후생복리비 (세대평균)	99,750 (29)	0 (0)	1,942,161 (662)	0 (0)
	주거환경개선비	2,700,000	1,492,282	350,000	0
	소계	8,923,151	6,392,349	8,423,386	0
협의체 운영비	138,103	84,578	237,398	104,839	
총계	11,236,566	9,202,454	9,700,651	104,839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서울시 자체처리시설 증설 문제

○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라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1,080톤/일 규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자원회수시설 이외에도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500톤/일)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의 공동이용을 확대(100톤/일)하며,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를 추가 설치(480톤/일)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가 실시하는 ‘2019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균 164점보다 24점 높은 188점을 받아(전국 168개 소각시설 중 4위)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우수하고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은 바 있음. 또한 2019년 기술진단 용역 결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주요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시 향후 15년까지는 현재의 처리량을 유지하며 운영 가능하다고 진단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시설의 폐쇄는 동일 규모 이상 대체시설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해야 할 것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용량 및 증설 필요량>

(단위: 톤/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기존 처리시설 용량		처리 부족량	증설 필요량
	설계용량	적정처리 가능량		
3,033	2,898	2,144(74%)	889	1,080

- 설계용량 : 은평 48톤/일 포함
- 적정처리 가능량 : 설계용량 2,898톤/일 × 300일/365일(가동일) × 0.9(여유율 10%)
- 처리부족량 : 발생량 3,033톤/일 - 적정처리 가능량 2,144톤/일
- 증설필요량 : 처리부족량 889톤/일 × 365일/300일

## □ 검토 의견(결론)

-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및 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4개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3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 148만명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자, 주변지역에 집단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시설임.

-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는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추가 시설용량의 확충(1,080톤/일)이 필요한 서울시의 여건 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대체 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체 부지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강서구와 영등포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하여 3개 자치구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 유발이 우려됨.
- 다만,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및 이전 문제는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